

# 풀어진 방역의식...거리두기 방심 땀 급속 확산 못 막는다

광주 고위험시설들 출입명부 작성하지 않고 손소독제도 없어  
방판업체·예식장 등 다닥다닥 붙어앉아 강의·식사 '감염 위험'  
청정 지역 홍보하며 관광 계획 등 지자체 잘못된 시그널도 한몫

광주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2일 오후까지 6일 만에 4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가 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광주지역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도심을 돌아다니기 무섭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방역 모범 지자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방역 관계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으로 시민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점, 확진자가 잇따르는데도 선불리 코로나비상 조치를 완화하는 등 자치단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준 점 등이 맞물려 확산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느슨해진 시민의식... 돌아다니기 무섭다=옛날만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상 속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48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60대

이상 노인들이 31명(63.2%)에 이르는 실정인데도, 노인들 방면이 잦은 시설의 방역 수칙은 미흡하고 행정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상무역 인근 10층짜리 건물에 위치한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광주시가 파악중인 634곳의 방문판매업체 중 한 곳이지만 광주시의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광주시의 방역수칙은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간격을 준수토록 하고 있지만 2일 오전 10시께 현장에서 만난 노인들은 서로 마주보고 다닥다닥 붙어앉아 강의의 화장품-건강식품 설명을 듣고 있었다. 5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데도, 출입자명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손소독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위험시설인 노래방과 PC방도 비슷했다. 2일 찾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코인노래방, PC방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출입-이용하는 데 전혀 제한이 없었고 출입명부 작성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시스템을 권하는 시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동구지역 헬스장 등 건강시설도 출입자명부만 작성할 뿐 실내에서 운동중인 회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운동 기구를 번

갈아 이용하고 있었다.

대중교통 기사들과 시민들 간 마스크 실량도 여전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기사의 제지로 거부당했다. 일부 버스에는 손 세정제가 떨어졌는데도 보충하지 않아 승-하차시 손 세정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개인접시에 음식을 떨어뜨거나 포장된 식기를 제공하는 음식점도 많지 않고 마스크도 없이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손님도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예식장의 안일한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6-27일 광주 48번 확진자가 거쳐간 광주시 서구 예식장 3곳의 CCTV를 확인한 자치단체측은 "예식장 내부나 피로연 등에 참석한 하객들 중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늘면서 개인별 방역지침 준수와 관련된 긴장감이 느슨해진 게 문제"라며 "긴장감이 풀리면 대규모 확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코로나 초기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정 자치단체"...선불리 홍보하면서 잘못된 시그널 줬=광주시 등 자치단체가 확산세가 주춤한 틈을 타 '잘못된 시그널'



2일 오전 광주시 서구의 한 방문판매업체에서 노인들 수십명이 모여 제품설명 듣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을 준 점도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등 불안감이 여전한 데도,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관광 정책을 홍보하고 집단 관광을 계획하는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느슨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장, 광주시 동구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지난달부터 슬슬 수도권 기

지단, 블로거,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를 알리는 '팸투어'에 나섰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여름 휴가시즌을 겨냥,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청정지역이라며 여행상품을 내놓아 시민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했다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산-제발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는 단어가 상충돼 정부와 지자체의 고심이 많겠지만 지금은 완화보다는 강화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대현 센터장은 "최근 완화된 사회적 분위기로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 현상은 예측된 일"이라며 "긴장 상태가 지속되다가 풀리면 안전사고가 크게 나뉘어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 1명에서 1000명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노인 일자리사업 다시 전면 중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5월 재개됐던 노인일자리사업이 다시 전면 중단됐다.

광주시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참여자와 종사자들의 안전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2일까지 6일 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49명으로, 60세 이상 확진자는 31명에 이른다.

광주시는 오는 15일까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3가지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중단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참여해온 노인들은 모두 2만4012명에 달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노인일자리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지역 5개구는 지난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제히 재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빛원전 2호기서 또 공극 3개 발견

계획예방정비중인 한빛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0MW급)에서도 3개의 공극이 발견됐다. 지난 2018년 18개의 공극이 적납건물에서 발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2일 한빛 2호기의 적납건물 공극점검 과정에서 주 급수배관 및 배기배관 관통부하

부에서 콘크리트 공극 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빛 3호기와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보다는 크기와 위치 갯수면에서 경미한 수준이라는 게 한빛원자력본부측 설명이지만 공극자체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부실시공의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공극은 주 급수배관 중 두 곳, 배기배관

중 한 곳에서 발견됐고 가장 깊은 공극은 76cm로 표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측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철근과 보강 철물에 의한 콘크리트 유동 간섭 및 다짐부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납건물과 배기배관을 연결한 와이어 연결부에서 윤활유가 새어나와 콘크리트 시공 이음부 등 미세한 틈으로 스며들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때 감금·고문 부상 피해자 40년만에 보상 받는다

의료지원금 1000만원 지급 판결 원심 뒤집고 2심에서 손 들어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산보안부대 지하실에 감금돼 고문을 받고 코뼈가 휘는 부상(편위된 비중격)을 입은 피해자가 40년 만에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정부는 의료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40년 전인 1980년 5월 18일께 부산 동래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부마항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보안부대 지하실로 끌려가 보름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코뼈가 휘는 부상을 입고 지난 2015년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5·18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연행돼 구금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상의 경우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로 체포, 40여일간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데 따라 받았던 보상과 구분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복보상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코뼈가 휘는 부상과 뇌하수체 기능 항진 등의 경우 1980년 5월 18일께 체포돼 구금된 당시폭행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구금된 뒤 폭행 등 가혹행위로 코뼈가 휘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5·18 보상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18 보상법(6조)은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1차 수술을 관련법 시행 이후인 1994년 받았다.

또 코뼈가 휘는 등의 부상인 '편위된 비중격'은 코에 격렬한 접촉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부마민주항쟁 보상 결정에도 '편위된 비중격'은 포함되지 않았고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해 6월 2일까지 부산보안부대에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